

무안국제공항 인근 또 태양광시설 '반발'

공항 활성화 찬물·창포호수 환경 파괴 불가피 규모만도 90만평 넘어...“사업 막아달라” 진정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될 경우 무안공항 도로를 경계로 90여 만평이 넘는 부지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태양광 설치 반대 망운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무안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공항 활성화는 물론 인근 창포호수의 환경보호에도 역행한다”며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9월 N산업과 태양광전전문업체 T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발전허가를 신청했다. 무안군은 최근 주민과 공항공사,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을 받아 산업부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는 219만2991㎡(66만3389평) 부지에 발전용량 185MW급 규모이다. 인근 84만8100㎡(25만7000평, 80

MW) 부지에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발전시설을 더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는 304만㎡(92만 여평)에 달한다.

대책위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무안발전을 저해하고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로 추가개설과 항공물류 배후도시 조성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간척사업으로 조성돼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살 등의 서식처인 120만평 규모의 청정호수 창포호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바로 앞에 100만평 규모의 태양광사업이 들어서면 무안공항은 배후경제권을 잃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뿐만 아



무안국제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니라 국가적 손실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년 동안 적자공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 기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창포호수의 경관과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상황임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추진

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춘 대책위원장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 최소 20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경우 40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해 버린다”면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곳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호남고속도로서 경차·승용차 추돌...2명 경상

21일 오전 8시45분께 전남 순천시 승주읍 호남고속도로 순천2터널 인근 도로(광주 방면)에서 A(36)씨의 경차와 B(37)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사고 직후 승용차가 갓길 옹벽을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났다.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산단 협력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30대 직원 입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협력업체 내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산단 한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남녀 공용화장실에 소형카메라가 설치됐다.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카메라 저장장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직업교육기관 수습역 횡령 의혹, 피의자는 숨진채 발견

국고 보조를 통해 전문직업인 위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습역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직업교육기관이 지난 16일 직원 A씨(30대 남성)가 국가보조금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기관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공금 25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의 경제인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이 기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취업자·재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소인 A씨는 고소장 접수 전날인 이날 15일 전남의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횡령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의심’ 신고 20일뒤 숨진 16개월 여아...부모 조사중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여아의 부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의 부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여아 사망 당시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부모의 진술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들의 학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전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자 조사와 피해 아동의 진료 내역 및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학대 여부 및 사망과의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는 자정 전에는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16개월 된 여아 A양이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A양에 대한 부검을 함께 신청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실패 ‘주차난·교통체증’ 초래

“호남고속철 2단계·경전선 전철 등 이용객 폭증 예상”

광주역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난·교통체증 심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 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 증축했지만 실제 3배 가까운 2만5646명(2019년 12월 기준)이 이용해 ‘영터러’ 수요 예측이라는 주장이다.

광주 송정역은 2015년 4월 KTX

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금·토·일) 이용객 기준 일 평균 2015년 5913명에서 2016년 1만 6164명, 2017년 2만 2504명, 2018년 2만 4507명, 2019년 2만 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이용객 1만 7151명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적는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송역도 1만9803명이 이용하면서 연면적 2만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은 2만 5646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의 1/4에 불과한 연면적 5754㎡와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송정역과 비슷한 규모인 오송역과 비교하면 1인당 연면적 1.01㎡ 대비 0.22㎡에 불과하고 대합실 면적 또한 1인당 0.27㎡에 비해 0.07㎡로 전체적으로 1/4규모 수준이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 증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협소한 송정역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비를 반영하고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 송정역 증축과 관련 2021년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김미희기자

치과병원 홍보한 인기 유튜버 기소의견 송치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 치과병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홍보한 혐의를 받은 인기 여성 유튜버에게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도야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모(30)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특정 치과병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홍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채널 도야TV는 현재 약 49만명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시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